

내 지역구 없어지나...호남의원들 벌써부터 불만 목소리

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지정...지역구 통폐합 선행 분주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을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지역구 의석은 28석 줄고, 비례대표 의석은 28석 늘어난 것이다. 여기에 초과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단위 정당득표율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구현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같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순항할 것인지는 미지수다. 현행 지역구를 28석이나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지역구를 '대수술'해야 하고, 현역 의원들의 이해관계를 건드려야 한다. 결코 합의가 쉽지 않은 문제다.

실제로, 지난달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역구가 225석으로 줄면 인구 하한선 미달로 통폐합 대상이 될 수 있는 지역구가 서울-인천-경기 10석, 영남 8석, 호남 7석, 강원 1석 등으로 나타났다. 호남이 직격탄을 맞는다는 계산이다. 영남도 8석 정도가 줄지만 호남에 비해서는 현 의석수가 3배

인구하한 미달 지역구 28석 감축

광주 2·전남 2·전북 3석 대상

평화당 "농어촌지역 보완 조치"

통폐합 대상 지역의원들 신경전

라는 점에서 월등한 비교 우위에 있다.

호남에서 인구 하한선이 무너지는 지역구는 ▲광주 중·남을 ▲광주 서구 을 ▲전남 여수 갑 ▲전남 여수 을 ▲전북 익산 갑 ▲전북 남원·임실·순창 ▲전북 김제·부안 등이다. 현재 각 10석인 전남과 전북의 의석수가 한 자릿 수로 감소하는 것은 물론 광주 의석 수도 8석에서 최대 6석으로 감소하면서 호남 정치의 위상이 크게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를 반영하듯, 평화당은 이번 패스트트랙 합의의 전제로 "패스트트랙 지정 후 논의 과정에서 낙후지역과 농어촌지역 보완 조치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것을 주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호남 의석 수만 과도하게 줄어든다면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는 것이다. 평화당이 반대한다면 현재의 의석 구도하에서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어렵다.

여기에 지역구 통폐합 위기에 몰린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반대표도 예상된다. 이에 따라 여야가 협상을 이어가다 결국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의석을 유지하는 한편 비례대표도 늘리면서 총 의석이 330석 정도로 늘어나게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를 반영하듯, 호남 지역 의원들 대부분은 '현재의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야의 협상에서 선거법 개정안의 내용이 수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광주 모 중진 의원은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은 절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며 "지역구 28석을 줄이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며, 결국 여야 합의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현행 의석이 유지되거나 비례대표를 늘리는 방식으로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의원들은 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 원안으로 통과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통폐합 대상인 지역구 의원들은 보복을 낚으면서 미묘한 신경전도 펼치고 있다. 광주 모 의원 측은 "인근 지역구 의원이 최근 우리 지역구 행사에 참석하고 있어 은근히 신경쓰인다"고 밝혔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패스트트랙은 새 정치 첫걸음”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패스트트랙 처리 감사의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패스트트랙 출발했지만...본회의까지 최장 330일

여야 4당, 기간 단축 시도할 듯

특위·법사위 단계마다 고비

본회의의 표결 '변심표' 나올수도

선거제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이 우여곡절 끝에 완료됐다. 이제 선거제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2건, 검정수사권 조정안은 패스트트랙 열차를 타고 최장 330일의 여정을 시작하게 된다. 여야 4당은 이 기간을 최소 180일까지 줄이겠다는 계획이지만 온갖 장애물이 산적해 있어 본회의 처리까지 원활한 진행을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최장 330일 패스트트랙...여야 4당, 180일까지 단축 시도=국회법 85조 2항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상임위원회 심사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지구 심사 90일, 본회의의 부의 후 상정까지 60일의 기간을 거치게 된다. 여야 4당은 이를 최대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 상황에서 선거제와 공수처법, 검정수사권 조정안 패스트트랙 기간은 180일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선거제 개혁안을 논의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정의당 심상정 의원, 그리고 공수처법과 검정수사권 조정안을 논의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민주당 이상민 의원으로 모두 패스트트랙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정개혁위와 사개혁위 모두 위원장이 회의를 열어 여야 4당 의원들만으로 법안 의결을 서두르면 180일 상임위(특위) 심사 기간은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한국당이 상임위(특위) 심사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법 57조 2항에 규정된 안전조정위원회 구성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안전조정위원회는 구성일로부터 90일간 활동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여야 4당이 속도를 높이더라도 상임위(특위) 심사 기간은 최소 90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빠르게 되는 법사위 체계·지구 심사 기간 90일은 법사위원장이 한국당 여성규 의원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단축이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회의의 부의 후 상정까지의 기간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법안이 부의되자마자 상정한다면 60일 전부를 단축할 수 있다. 결국 여야 4당이 한국당의 협조 없이 최대한 속도를 낸다면 특위 심사 90일, 법사위 심사 90일 등 180일만 거치는 것으로 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단계마다 고비 예상...본회의의 처리까지 '산 넘어 산'=특위 심사와 법사위 심사, 본회의의 처리까지 단계마다 만만찮은 고비가 있다. 한국당이 특위 심사 중 소극적 참여로 논의를 묶어두는 것부터 의결 저지까지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면 여야 4당의 심사 기간 단축 계획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여야 4당은 이번 패스트트랙 지정에 '논의의 시작'으로 삼겠다는 생각이다. 일단 난항 끝에 함께 올린 두 개의 공수처 법안의 접점을 찾는 것이 제1과제다. 단일한 안을 마련해 본회의의 표결에 부치기 위해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패스트트랙을 진행하면서도 한국당과 합의해 법안을 처리하려는 시도 역시 이어가겠다는 것이 여야 4당의 입장이다.

특위 본회의에 상정된다고 하더라도 통과를 장담할 수는 없다. 선거제 개혁안의 경우 의원 개개인의 '밈그릇'이 걸린 만큼, 패스트트랙을 함께 추진한 여야 4당 의원 중에서도 '변심'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최원익 기자 cki@연합뉴스

문 대통령 “적정 임금·고용안전망 정책 성과 거두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고용지표들을 보면 고용 상황이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고용시장 안에서는 적정 임금 보장과 고용안전망 강화라는 정책 기조가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사회안전망·고용안전망 강화는 함께 잘사는 새로운 포용 국가의 기반이라는 점에서 정부·국회가 힘을 합쳐 사각지대를 빨리 메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2~3월 연속 전년 대비 취업자 증가 규모가 20만명대 중반 수준으로 올라섰고, 15~64세 고용률도

상승으로 돌아섰다”며 “특히 청년고용률이 크게 높아졌는데, 창업벤처 활성화 정책과 공공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청년 일자리 정책 등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일자리 질 측면에서도 상용근로자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고 고용보험 가입자가 3월에만 52만 6000명이 늘어 2016년 2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일자리 안정자금이나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과 정책에 힘입어 고용안정망 안으로 들어온 노동자가 크게 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과 임금 상위 20%와 하위 20% 간 격차가 크게 줄었다”며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5분의 1 이하로 줄고, 임금 5분위 배율이 5배 이하로 떨어진 것 모두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제조업·도소매업 고용 감소세가 이어져 40대 고용이 불안정한 상황에 놓인 것은 아주 아픈 부분”이라며 “생산 유통구조 변화와 함께 주요 업종의 구조조정과 연합 부진이 주요 원인인 만큼 업종별 대책을 꾸준히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한국당 해산” 청와대 청원 130만명 돌파...역대 최고기록

靑 “97% 국내서” 조작설 반박

“민주당 해산” 청원은 16만명

자유한국당의 해산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참 인원이 30일 오후 130만명을 돌파했다. 이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생긴 이후 최다 청원 참여 수치다. 이번 청원에 앞서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했던 국민청원은 'PC방 살인사건 처벌 감경 반대 청원'으로, 총 119만 2049명이 참여했다.

‘동물국회’ 사태 직후인 28일 청와대 담

번 요건인 20만명을 돌파했고, 29일에는 하루 만에 50만명 이상이 청원에 동참한 데 이어 30일 오전 9시에는 참여 인원이 100만명을 넘었다. 특히, 청원 만료일이 오는 5월 22일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추이가 이어진다면 5월 초반에 200만 명이 쉽게 넘어서지 않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여야 대립이 격화되자 각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민주당 해산’을 요청하는 청원이 이날 오후 16만명을 돌파, 조만간 20만명 이상의 동참을 얻어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채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답변 요건인 20만명 이상이 청

원에 동의하면 청원 만료일(5월22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공식 답변을 내놓는다. 6월 22일 전에는 답을 해야 하는 셈이다.

한편, 청와대는 ‘국민청원 게시판 접속자 위치 중 상당 수가 베트남으로 나오고 있어 청원 참여에 조작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 반박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홈페이지에 ‘국민청원 관련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팝업창을 띄우고 국민청원 방문자가 급증한 29일 기준 청와대 홈페이지 방문을 지역별로 분류한 결과 97%가 국내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가까운 무안에서 출발해요~ 이제 편리하게 가까운 무안공항에서 조이투어와 함께 하세요! 주~우~욱~^^~

특가가 쏟아진다! 빨리 GET 하세요!♥

가까운 무안에서 일본 기타큐슈 온천여행

TW티웨이항공 매주 화/금/일 출발

오후출발(화,금,일) 무안(20:20) → 기타큐슈(21:30) / 기타큐슈(22:30) → 무안(23:45)

- ◆ 기타큐슈, 벳부, 유후인 2박3일 [정통] 499,000원~ / [폭격] 599,000원
- ◆ 기타큐슈, 벳부, 유후인 3박4일 [정통] 699,000원~ / [폭격] 759,000원

특가 & 집중모객

- ◆ 기타큐슈 황금연휴 5/3,5,7일 출발 집중모객 499,000원~
- ◆ 다낭(베트남항공) 5월 가정의달 특가 화/금요일 출발 399,000원~
- ◆ 폭탄특가 세부 / 하이난 / 방콕 / 대만 / 코타카나발루 329,000원~

무안 ↔ 몽골 개척근로, 상품권소송

6월 15일 ~ 8월 28일 까지(매주 수,토 출발)

[수요일] 4일 1,098,000원~ / [토요일] 5일 1,148,000원~

무안 ↔ 동경 매일출발 일본의 수도 도쿄를 무안에서!

★최저모객인원 7명 출발보장★

- ◆ 출발확정 5/10, 24, 31 출발 동경&하코네 3일 799,000원!!
- ◆ [정통] 동경&하코네 3일(디즈니랜드선택관광) 749,000원~
- ◆ [정통] 동경&하코네 4일(디즈니랜드선택관광) 889,000원~

무안 ↔ 오이타 *살랑~살랑 봄바람* 타고

매주 월,수,금 출발(최소인원 7명 이상 출발보장)

- ◆ [월/수 출발] 오이타 벳부&유후인 3일 299,000원~
- ◆ [금 출발] 벳부&유후인&야나가와 벳놀이 4일 599,000원~

*예약시점에 따라 가격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안 ↔ 달랏(비엠팀항공)

7월 24일 ~ 3월 28일 까지(매주 수,토 출발)

[수요일출발] 4일 / [토요일출발] 5일 749,000원~

부산출항 ↔ 대마도 매일출발

[4월 ~ 5월 대마도 매일 출발]

- ◆ 오션플라워호 부산출항 1박 2일 139,000원~

무안 ↔ 대만 정기편(제주항공)

매주 월,화,수,목,금,토,일 매일 출발

- ◆ [노팁,노음선] 스펀,단수이,야류,지우펀 699,000원~
- ◆ [고품격] 화련,테로각,지우펀,야류 699,000원~

무안 ↔ 다낭(베트남항공&제주항공)

매주 월,화,수,목,금,토,일 매일 출발 3박4일

[바나팍] 599,000원~ / [후에폭격팩] 699,000원~

[노팁&노음선] 849,000원~

무안 ↔ 블라디보스톡(제주항공)

- ◆ [월,수,토요일 출발] 블라디 ONLY 2박4일 549,000원~
- ◆ [월,수,토요일 출발] 블라디+우수리스크 2박4일 679,000원~

※모든 여행 상품에 따라 포함사항과 불 포함사항이 다르으니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 양국정부인허가조건 ※ 운항스케줄이 항공사 및 천재지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출발 날짜와 인원 수에 따라 상품 가격이 다르니 홈페이지 및 전화상담을 통해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 기획여행 보증보험 가입 업체 등록번호 : 제등다2003-1호
 ※ 공통조건 : 여행기간 1인 기준, 여행지보험 가입(책임상용 : 1억엔, 국내상품 50만엔), 관광진흥법(기금), 관광 및 모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 교통편 : 항공 및 선박, 전철/버스 / 전 지역 ※ 상거 요금은 항공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년 연인보증보험 가입 / 여행금지 가입 업체 ※ 예약시 계약서(해상 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경비업(단, 기사/가이드 봉사료, 선석관광, 각종 비자비용 별도) ※ 출발 당일엔 : 상황에 따라 다름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 JOY TOUR

2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대표전화: 1522-1901 F A X : 062-234-3141
 조이투어 JOY TOUR 광주광역시 동구 구서로 180(금남로57가) 광주광역시 동구 구서로 180(금남로57가)
 여행 길이 즐거운 동반자!! http://www.joytour.kr
 일본여행 / 국내·제주여행 / 해외여행 전문여행사 조이투어 대표이사 최금환